

“손에 쥐는 돈 줄고 이자부담 늘고” 자영업자 소득 6년째 뒷걸음

2023년 개인사업자 연평균 소득 1859만원
2017년 2170만원이었으나 6년새 14.3% ↓
상위 20%·하위 20%간 격차 2배로 벌어져
자영업자들, 대출압박 시달리며 폐업도 늘어

자영업자 등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 평균 벌이가 6년째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벌어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사업소득 신고자는 772만1416명이었다.

이들의 총 소득금액은 143조5025억 4000만원으로, 소득 평균값은 1859만원이었다. 연평균 소득이 2170만원까지 올랐던 2017년과 비교하면 6년 새 14.3% 추락한 것이다.

특히 해당 기간 자영업자의 평균 벌이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2170만원 ▲2018년 2136만원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 ▲2021년 1952만원 ▲2022년 1938만원 ▲2023년 1859만원이었다.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일직선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인 ‘소득 중위값’도 매년 후퇴 흐름을 보였다.

2017년 830만원이었던 소득 중위값은 코로나19 팬데믹 타격을 받았던 2021년 659만원으로 내려앉았고 2023년에는 637만원까지 떨어졌다.

소득 구간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각각 1억5478만원과 374만원으로 41

배의 격차를 보였는데, 2023년에는 1억 3901만원과 141만원으로 그 차이가 98배로 심화됐다.

두 구간의 연평균 소득이 6년 새 모두 줄었지만, 상위 20%보다 하위 20%의 소득 감소 폭이 더 커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집합금지 등의 조치와 그에 따른 소비 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며 직격탄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가게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영업자들은 이후 고금리로 상환 부담이 커지자 가게 문을 열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극히 일부라고 토로했다.

세종시 어진동에서 10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김모씨는 “코로나 당시에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는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내수 부진에 소비 침체까지 겹치면서 손에 쥐는 돈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다. 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A씨도 “하루 장사를 마무리한 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가게 임대료며 재료가며 나가야 할 돈은 산더미”라며 “코로나, 경기 침체,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계엄 사태까지 자영업자인 우리는 풍전등화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렇처럼 경기 침체를 직격으로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해 지난 2023년 1월(549만9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뉴스시스

맞은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대출 상환 부담에 내몰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으로 같은 해 2분기 말인 1060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4조3000억원이 늘었다.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3분기 말 총 18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70%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최근 두 달 새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했다. 지난 2023년 1월(549만9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570만6000명 수준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두 달 동안 20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560만~570만명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2020년에는 550만명대로 떨어졌다.

팬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는 560만명대를 회복했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줄곧 570만명 선에서 움직이다 11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기 팽창에서 차진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목(53)씨는 “주변에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불법대부업에까지 손을 벌리는 자영업자들도 보인다”며 “적어도 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뉴스시스



광주은행, 전남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위해 15억원 특별출연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9일, 전라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광주은행은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총 225억원의 특별보증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광주은행 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추천한 전남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대출금리를 최대 연 1.5%p(포인트) 감면 지원한다.

한편, 광주은행은 2020년부터 매년 10억원씩, 2024년부터 15억원씩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최근 6년간 총 70억원 특별출연과 총 930억원의 특별보증대출을 공급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특별보증이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을 이루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단독·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부사업 연계 설치비의 70%가량 지원… 26일부터 접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단독 및 공동 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시민이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사업에 선정된 가구에 시비 1억2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광주시는 또 ‘RE100 실현’을 위해 정부사업과는 별도로 예산 4억원을 투입, 자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정부사업 연계 시비 지원 규모는 최대 150만원(태양광 3kW 단독주택 저탄소모델 기준, 태양열 14㎡ 이상, 지열 10.5kW 초과)이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3kW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총 비용 493만원 중 국비 179만원, 시비 15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64만원은 자부담이다. 태양광 3kW를 설치하면 월 발전량은 약

315kWh(킬로와트시)로, 4인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 약 307kWh를 웃돌아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이 가능하다. 이를 월 전기료로 환산하면 6만9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설치 전문기업을 선택해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특히 정부 지원금이 예산 범위 내 선착순인 점을 감안해 사업 희망자는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5월 말 정부사업이 마감됐다.

광주시는 ‘RE100 실현’을 위해 정부사업과 별도로 자체 예산 4억원을 투입, 설치비의 약 70%를 지원하는 ‘가정부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신종필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4일부터 4월1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농민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년도에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족·곤종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단,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꼭 신청하세요”

5월말 농가당 60만원 광주선불카드로 지급… 내년까지 사용

원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특히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격확인 및 검증기간을 대폭 축소해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른 5월 중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광주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농민공익수당 카드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광주시는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 사용기한을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줄일 방침이다.

이는 농민공익수당의 조기 사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분실·미사용 등으로 카드에 남아있는 자투리 잔액을 모아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